

‘광주 민간공원 특혜 비리’ 전·현직 공무원 징역형 구형

“공정성 훼손” 정종제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 징역 3년

전 광주시 감사위원장·생태환경국장 징역 2년 6개월

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부당한 지시·압력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종제(58)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59) 전

감사위원장,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정삼(56) 전 생태환경국장,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시정 공무원 양모(5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정 전 부시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감사위원장과 이 전 국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양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이들이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버려 죄질이 나쁜 점, 민간공원 특례 사업 전반의 공정성·투명성과 신뢰를 훼손시킨 점,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할 기회를 박탈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

고 설명했다.

정 전 부시장 등은 2018년 11월과 12월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 우선 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도록 한 혐의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업체(호반)의 이의 제기를 받아주고 특정(표적)감사를 벌인 데다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제외해 특혜를 줬다고 봤다.

검찰은 또 이들이 고위 공직자의 직권을 남용, 감사 결과를 뒤집거나 제안 심사 위원회에 특정 안건을 상

정하지 못하게 해 감사위·심사위 권한·업무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초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광주시 도시공사의 지위 반납을 종용하는 등 도시공사와 시 공원녹지와 직원들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오류가 있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시와 업무 수행이었다. 평가 점수가 달라졌기 때문에 업체를 변경한 ‘적극 행정’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있던 부지를 건설사가 매입한 뒤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018년 12월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를 광주 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변경했다.

광주경찰청이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 달라며 고발장을 내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오유나 기자



‘아빠 오징어 게임 알려주세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플라스틱 프리 페어’ 박람회개 열린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오징어 게임’을 즐기고 있다.

‘프로포폴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내일 1심 선고

총 41회 프로포폴 불법투약한 혐의

항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수십회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재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오는 26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전력이 없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횟수와 기간을 합쳐 7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 1702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수고·격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 모두 제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 치료를 위한 것이었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경영권, 국정농단 수사·재판, 삼성 합병의혹 수사·재판으로 개인과 삼성 임직원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고인(이 부회장)이 어려움을 자기 부족함이라고 자책한 것을 헤아려 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31일부터 지난해 5월10일 사이 총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밀린 공사비에 분신한 사건...경찰, 건설업체 대표 영장

중소업체 30억원 상당 공사대금 지급하지 않은 혐의

경찰이 빌라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 수십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시행사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까지 전주 시내 한 빌라 공사 현장에 참여한 지역 중소기업들에 30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들은 ‘빌라가 준공되면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주겠다’는 A씨의 말에 공사에 참여했고,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되고 관할 구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이 완료됐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

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공사에 참여한 B(51)씨가 지난 1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분신하면서 알려졌다.

6000여 만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B씨는 미성년인 세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슬비기자

항소심 집행유예에 선고

자신이 도수치료 중인 환자를 위력으로 수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30대 물리치료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물리치료사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 3일 지역 모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하면서 여성 환자 B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발언은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다만, 발언과 함께 도수치료 과정에 이뤄진 행위가 추행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치료와 무관하거나 치료의 범위를 넘는 추행 행위이자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함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양해 없이 희롱하며 신체적 접촉을 한 A씨에게 추행 고의가 인정된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태나 치료의 목적에 대한 설명 없이 성희롱 발언 전후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도수치료를 방자한 추행 행위”라며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명백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기동취재본부

도수치료 환자 성추행·희롱 물리치료사, 무죄→유죄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